

## 광주·전남 불법 대부업 사각지대 전략

전담인력·점검 예산 '전무' ... 기본 보고도 없어  
금융당국 위법 단속해도 과태료 마저 '호지부지'

광주·전남지역이 '불법사채' 사각지대로 전략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은 지역 내 대부업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기능이 전무한데다,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의 불법행위 적발에도 사후 처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8,084개다. 금융위 등록 업체가 1,249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가 6,835개다. 이들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2013년 말 10조16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014억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은 290개, 전남의 경우 122개 등 모두 412개 대부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법령상 규정된 광역단체 차원의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전담 기구를 운영하는 등 최소 1명의 담당 공무원이 배치됐지만, 광주·전남지역은 단 한명의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별도 감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대부업체 정기 검사는 오로지 불법 민원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여기에 특정 민원은 전문 인력이 없어 일선 시·군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등 사실상 대부업 감독 체계가 부재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광역단체별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부업 영업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또 광역단체장은 이같은 내용을 조사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광주·전남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지역 내 대부업 관리 감독 기능 자체가 부재되면서 금감원과 일선 시·군에서 적발한 불법행위의 후속조치도 미흡했다.

광주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업 민원 3,051건·관련 업자 383명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전남은 위반업자 80명을 적발해 11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지역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차입비중이 높은 일반 서민들의 이자 및 채무부담은 각종 불·탈법 속에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남 한 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이 고리 사채를 지인에게 운영하다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대부업 특성상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자가 연락두절로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민 기자



광주국제식품전 개막 1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광주국제식품전' 개막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광주향토음식특별전을 둘러보고 있다./김태규 기자

## 전남 해상 '쓰레기 천국' ... 전국 발생량의 24% 차지

플라스틱 비중 해마다 증가  
정부 수거비용 지원 늘려야

전남지역 해상에서 매년 1만6,000t 이상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되는 등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1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수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8만2,283t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전국에서 발생한 34만8,155t의 쓰레기 중 전남이 2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5만8,297t(16.7%), 제주 3만8,939t(11.2%), 충남 3만7,666t

(10.8%) 순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5년부터 전국 해안 40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류였으며 2013년 47%에서 2017년 58.1%로 증가했다.

이처럼 플라스틱 쓰레기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3년 4만

9,080t에서 2017년 8만2,175t으로 67%나 증가했다.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추정된 해양쓰레기 발생량 9만 1,195t에 가까워지는 추세다.

박완주 의원은 "세계적인 환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쓰레기가 전남 해안에서 가장 많았지만 해수부는 쓰레기 수거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국가 지원을 늘려 지자체가 자원 격 없이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

Imagine Your Korea

2018 대한민국의 **국화향대잔**

국화가 그리는 가을날의 동화!

**함평엑스포공원 10.19~11.4(17일간)**

주최: 함평군 / 주관: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 문의: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T.061.320.1784 www.hampyeong.go.kr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의꽃화동호회

## 초미세먼지 2030년까지 21% 줄인다

'청정광주' 5개년 계획 시행...32개 사업 6,830억 투입

광주시는 '미세먼지 없는 청정광주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 오는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1%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차 보급을 비롯한 정부정책 시행과 함께 시민실천본부 가동, 미세먼지 측정 및 알람, 미세먼지 회피·대응, 미세먼지 발생 저감사업 등 5개

분야 32개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566억원 편성하는 등 2022년까지 32개 사업(신규 21, 계속 11)에 6,830억원(국비 4,632억원, 시비 2,1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실천본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경보발령 시 시민

차량 2부제 참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가동중지 등 주도적 역할을 한다.

시는 내년 '미세먼지 발생원 실태조사' 용역을 2년에 걸쳐 실시하고, 미세먼지 청소와 폭염대응을 위해 도로변에 고정 살수장치를 설치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한편,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를 줄이는 '먼지억제제 살포사업'도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강성수 기자

## 코스피 4% 폭락 '검은 목요일'

당분간 평년보다 '쌀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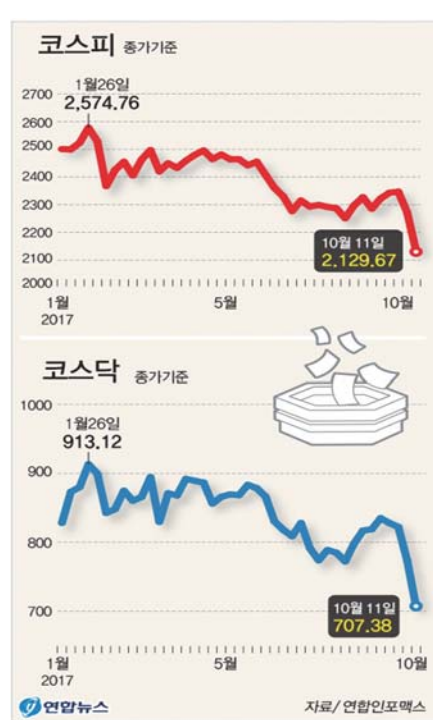
미국 증시가 급락한 여파로 11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98.94포인트(4.44%) 내린 2,129.67에 장을 마쳤다. 8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이로써 지수는 증가 기준으로 작년 4월 12일(2,128.91) 이후 1년 6개월 만의 최저로 떨어졌다.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한 것은 2014년 4월 23일~5월 7일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

지수 하락 폭은 2011년 9월 23일의 103.11포인트 이후 약 7년 만의 최대다. 지수 하락률은 2011년 11월 10일(-4.94%) 이후 가장 높다. 지수는 전장보다 52.45포인트(2.35%) 내린 2,176.16으로 출발해 외국인 매도 공세에 낙폭을 더 키웠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에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분포하면서 당분간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이다.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2일과 13일 아침기온은 평년보다 4~7도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온도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에 낮은 기온이 형성되면서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2일은 최저기온 5~10도, 최고기온은 18~20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김종찬 기자